

20. '95不實工事 防止 監査活動 및 '96建設工事 監査方向 (3不 追放에 의한 安全文化定着)

資料提供：監査院

1. 우리의 건설산업 현황

□건설산업의 위상('94년)

- 대 G.D.P(국내총생산)비중 : 13.5%('80년 : 8.0%)
- 고정자본 형성액 : 63.5%('80년 : 55.7%)
- 건설업 종사자 : 1,777천명(총 취업인구의 8.7%)
- 건설업체 수 : 2,963개(전문 : 18,758개사)
- 해외공사 수주실적('95년) : 184건(총계약금액 8,508백만불)

□건설분야 국내 기술수준

기술선진국 G7수준 대비

- 시설물의 시공능력은 80% 수준까지 향상된 반면,
 - 설계·감리·유지관리기술은 아직 40~60% 수준에 불과
- ※엔지니어링 기술능력 부족이 주 원인

□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환경변화

정부조달협정에 따라 1997.1.1. 부터 공공건설시장 개방

양 허 기 관	양허범위(단위 : 만 SDR)		
	건설	서비스	물품
중앙정부(42개 중앙행정기관 등)	500	13	13
지방정부(서울시, 5개광역시 및 9개도 등)	1,500	20	20
정부투자기관(23개 기관)	1,500	-	45

※1SDR≒1,151원('96.1월 현재)

2. '95 부실공사 방지 감사활동

가. 감사활동 총괄

- 감사사항 : 24개 사항(일반 : 3, 특정 : 11, 기동 : 6, 기타 : 4)
- 감사대상 : 건설교통부 본부외 103개 기관
- 감사인원 : 연 8,901명

나. 주요 감사성과

□고의적 망국적인 부실공사의 근원적 추방을 위해 대형공사 현장에 대한 불시 기동감사 실시 등 '95년도에도 엄정하고 심도있는 감사 지속 실시

- 총 669건의 위법·부당사례 적발
 - △이중 320건(48%)이 부실공사 관련
- 공사 감독업무 태만 등 비위관련 공무원 136명 징계 등 조치
- 부실공사에 따른 603억원 상당의 공사를 철거·재시공 등 시정조치
- 부실공사관련 171개 설계·시공업체 및 75명의 기술자들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등 조치

□다중이용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및 안전관리실태 점검

- 「강교설치공사 및 유지관리실태」, 「다중이용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실태」 등에 대한 감

사실시

-노후·위험시설물에 대한 불안요인 제거

□건설시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

- 공공공사 책임감리관련 제도
 - 책임감리 시행기관, 대상공사범위, 감리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
- 건축사 인력 및 사후관리 관련제도
 - 건축사 수급, 시험제도, 사무소 등록 기준 등
- 철강재 설치 공사 관련 제도
 - 면허, 하도급, 지방서, 유지관리 기준 등

□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건설관련자의 의식개혁 활동 지원

- 명예 감사관 위촉
- 부실공사 방지 시민안전감시단 발족 지원
- 부실공사 추방 공개토론회 개최(부정방지대책위원회)
- 188 신고 제도 적극 홍보(부실공사 관련 108건 신고·접수)
- 기관장의 자발적 동참을 당부하는 감사원장 서한 발송, 공사현장 방문 독려 및 부실공사 방지 화보집 발간 배포 등

다. 부실공사 척결 감사활동 평가

□개선·발전된 면

- 당원에서는 1994년을 「부실공사방지 원년의 해」, 1995년을 「건설환경 개선 및 품질 혁신의 해」로 선포하고, 부실공사 척결감사활동을 꾸준히 추진
- 불합리한 건설관련 제도의 개선 및 공사관계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통하여 건설환경 개선 유도
- 명예감사관 위촉, 부실공사방지 시민안전감시단 활동 지원 등 부실공사 척결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유도

→「부실공사는 근절되어야 하며 국민감시를 벗어날 수 없다」는 의식변화 크게 확산

□미흡한 면

- 그러나, 일각에서는 이러한 부실공사 근절의지를 일과성으로 생각하고 부실시공 및 안전부실 등 잘못된 관행을 반복
 - 고질적 병폐인 적당시공, 눈가림시공, 부당 하도급 등의 잘못된 관행이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실정
 - 건설업계의 신기술소화·적용능력, 설계·시공·감리기술자와 기능공 자질 등도 아직은 기대수준에 미흡
- 이러한 상태가 조속히 개선되지 아니할 경우, 또다른 시설물의 대형사고 발생 등으로 「부실공화국」의 오명을 벗어날 기회 상실 우려

3. '96 건설공사 감사활동 방향

가. 감사원 감사운영 방향

□기본방향

- 민생분야 감사 확대로 삶의 질 향상 유도
- 지속적 부실공사 추방으로 안전문화 정착
- 부정·부패 척결을 위한 지속적으로 개혁 사정 전개
-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
- 성장 장애요인 색출·제거로 국가경쟁력 강화·지원
- 적극적 창의적인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



「국민에게 다가서는 정부, 정직한 정부, 경쟁력있는 정부」 구현

□부실공사 추방관련 중점 실천과제

- 환경시설, 가스·아파트 등 민생관련 주요공사 단계별 기동점검
- 다중이용 시설물, 노후 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
-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건설환경 개선
- 국민참여를 통한 부실공사 방지 상시 감시체계 활성화 및 부실공사 척결 정보 강화
- ※ 대형 투자사업에 대한 경제·능력·효율성 분석, 예산낭비 시정
- ※ 주요 구조물 안전관리실태, 주요 공사현장 연중 기동감사

나. 건설공사 감사활동 방향

□감사목표

- '96년을 「3불 추방에 의한 안전문화정착의 해」로 선언하고 부실공사 요인인 설계부실·시공부실·감리부실 등을 추방하기 위한 감사활동에 총력을 다하면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활동 지속 추진
- 부실공사 관련업체 등은 법의 허용범위내에서 엄단조치

□추진 중점별 감사활동 계획

- 환경시설, 아파트, 도로 등 민생관련 주요공사 불시 기동점검
 - 취약 기관공사·부실소지 공사 등에 대한 현장 불시 기동점검 확대 실시
 - 환경시설, 아파트 등 민생관련 주요공사 연중 지속 기동감사 실시
 - 도로, 택지개발 등 특정분야 공사현장에 대한 불시·계통 감사실시
 - 설계부실·시공부실관련자 강력응징 및 기관장 책임추궁 병행
- 다중이용 시설물, 노후 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
 - 교량, 건축물 등 주요 공공다중 이용 시설물의 안전관리실태 지속 점검, 안전부실관련자 엄단조치
 - 시설물 안전관리 부실의 원인분석 관리체계·기능의 효율성 제고 방안 모색

-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건설환경 개선
 - 하도급 계약·대금지급 실태, 신기술·신공법 관련제도 운영 실태 등에 대한 감사 실시로 최일선 공사현장의 건설환경 개선 도모
 - 건설업 면허관리, 공공공사 감리제도 등에 대한 감사실시로 건설기술자·기능공 등의 능력제고 및 성실시공 기술자 우대방안 모색

- 대규모 건설공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감사 실시
 -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성과감사 활동 전개
 - 전담반 구성, 다단계 공사현장 감사 실시로 문제점 도출
 - 시공의 부실화 예방, 불합리점의 대안제시 등으로 사업효율성 제고

- 국민참여를 통한 상시 감시체계의 활성화 및 부실공사척결 정보강화
 - 성실시공 독려를 위한 각종 홍보활동 전개(TV 공익광고 등)
 - 「188 신고」, 「명예감사관」, 「부실공사방지 시민안전감시단」 등 국민 감시체계 구축 지원 및 부실공사방지 제보 적극 활용
 - 건설시공 현장의 발굴·전파, 현장교육 등 건설관계자의 의식 개혁을 위한 지원활동 지속 추진

다. 감사활동 성과제고 방안

□ 과학적이고 신속한 감사 실시를 위한 첨단 감사장비 확보

- 불시·기동점검 차량확보
- 구조안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최첨단 검사장비 도입
 - 감사결과 신뢰도 제고

□ 「공사감사 자문위원회」 구성 및 운영

- 건설관련 제도, 설계·시공, 유지관리 등 각분야 전문가로 구성
 - 감사계획, 감사실시 및 결과, 건설환경 개혁을 위한 제도조사 등과 관련하여 수시 자문 실시

- 전문기관과의 연계구축으로 합동 감사 방안 등도 검토 추진
→ 전문분야 감사역량 제고

□ 공사이력 관리를 위한 「공사감사 전산정보 시스템」 구축

- 각 기관별 공사집행 현황을 전산디스켓으로 징구
- 공사 이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입력 자료 확보
- 기관별, 업체별, 부실공사 내용을 분석하여 중점관리
→ 부실공사 관련자 등에 대한 체계적·과학적인 정보관리로 실지감사시 활용

4. 맺는 말

시대적 소명이자 과업인 「부실공사 근절」을 통하여 삶의 질향상과 안전문화 정착

□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

- 각급 기관 및 건설업체에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·공사현장 관리 개선 필요
- 현장 건설기술자 및 기능공은 물론 건설업체의 경영자도 부실공사 방지에 솔선수범
- 부실공사 추방을 범 국민적 운동으로 유도

□ 그렇게 하여야만 선진화된 건설환경 조성 가능

- W.T.O. 출범으로 개방되는 국내 건설서비스의 무한 경쟁에서 생존가능
-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막고 건설업계 신뢰성과 기술능력 향상가능

조력 및 당부사항

당해 기관 및 산하기관에 회의내용을 전파하여 부실공사 추방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관계 책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당부